

국비 확보 성공...이개호, 지역구 ‘미래 지도’ 바꿨다

‘함평 교통안전연구원’ 신규 확보 쾌거
담양·영광·장성지역 대거 반영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9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함평군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을 위한 국비 20억5천만원을 신규 확보하며 또한 번 국가기관 유치라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담양 국립정원문화원,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영광 e-모빌리티 클러스터, 장성 국립심뇌혈관연구소·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등 지역구 4개 군 모두에 굵직한 국가기관·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저력을 입증했다.

이번에 확정된 교통안전교육원은 총사업비 424억원(전액 국비) 규모로 내년부터 함평군에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된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왔으며 이번 성과 역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끈질긴 설득 끝에 얻어낸 결실이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요 신규·계속 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담양 관광 스테이 확충 4억5천만원(총사업비 185억원)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억원(총사업비 131억원) ▲영광 미래차 전자파 잔향실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10억원(총 200억원) ▲장성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열관리 기술개발 16억원(총 276억원) 등이

반영돼 총사업비 802억원 규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지역별 핵심현안해결을 위한 성과도 돋보였다.

담양군은 고서·창평 국지도 건설, 대덕 매산 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교통·정주 여건 개선 예산을, 함평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노후상수도 정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중심지 도약을 위한 핵심부품 개발 예산 확보와 함께, 최근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면담해 총사업비 2조7

천485억원 규모의 ‘영광 청정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 건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거점 육성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건립 본격화 및 K-사찰음식관광명소화사업예산등을확정지었다.

이개호 의원은 “국가기관 유치와 대형 국책사업은 지역의 지도를 바꾸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라며 “이번 성과는 4개 군 공직자들이 원팀으로 똬뚝한 결과로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개혁 저항 이겨내야 변화 있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 아냐”
“종교단체 정치 개입...재단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는데, 해봤느냐”고 묻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

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조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광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 법제처장은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양부남,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 감사장 전달

숙원 마루동 탄약고 이전 예산 확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이 9일 오전 광주 마루동 탄약고 이전 사업 재개에 기여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2026년도 국비 예산에는 마루동 탄약고 이전 사업비 총 50억원이 최종 반영돼 사업 재개가 본격화된다.

양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지속 협력해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이전비 5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광주 지역,



특히 서구 주민들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탄약고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마루동 탄약고 이전은 광주 서구의 핵심 현안이자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였다”며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한병도 위원장에게 지역 주민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예산 확보라는 가장 큰 관문을 넘은 만큼 내년 설계 재검토 용역을 거쳐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처리

국회 교육위 ‘금식종사자법’도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

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 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위는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번호
220603-중-139779